

# 제주 '평화의 섬'의 국제정치적 배경 및 구축 전략\*

강 근 형\*\*

## I. 서 론

1991년 4월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제주 방문으로 이루어졌던 한소정상회담과 1996년 4월에 클린턴 대통령의 제주 방문으로 이루어진 한미정상회담은 제주도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 구축에 지정학적인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시모토 일본 총리와 강택민 중국 국가원수의 제주 방문도 제주도가 단순한 관광지로서 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신뢰구축을 위한 평화회담 장소로서 매우 유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고시켰다.

특히, 구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간의 제주에서의 정상회담은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탈냉전의 상징성을 갖게 됨으로써 제주가 단순한 국제관광지역에서 벗어나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꽃피울 수 있는 '평화의 섬'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제주 평화의 섬 구상에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위해 제주를 '평화의 메카'로 만들자는 원대한 꿈이 서려있다.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하자는 구상은 엄격하게 말한다면 제주도를 '평화지대'(Zone of Peace)화 한다거나 '중립화'(Neutralization)하자는 것이겠으나, 이러한 지위는 한반도가 처한 현실상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평화의 섬' 구상은 제주도의 평화지향적 이미지를 더욱 구축함으로써 제주를 동북아시아의 분쟁해결센타 내지는 평화협력센타로 만들어 나가자는 정도의 소프트한 개념이다. 다만 자위를 위한 무력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사기지 설치도 반대하는 비무장, 비군사화의 지역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정도의 '평화의 섬' 구상이라면 국제적 합의 도출은 물론 한국의 중앙정부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도 선거과정에서 대선공약으로 내걸만큼 제주의 평화의 섬 구상에 대해서는 대단히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제주 평화의 섬의 실천 전략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글에서는 제주 평화의 섬의 국제정치적 배경과 실천전략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국제정치적 배경은 냉전 이후의 동북아시아에서의 '다자간안보협의체'의 구축이 제주의 평화의 섬 논의와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이에 국한하여 기술하려 한다.

\* 이 글은 1996년도 아시아연구기금으로 고성준, 양영철, 강근형이 공동으로 수행한 "동북아시아 평화협력체제와 제주의 평화의 섬 구상" 중에 관련부분을 요약하여 발표하는 것이다.

\*\* 제주대학교

## II.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의 국제정치적 배경

일반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은 무역과 경제교류는 국가간 평화의 원천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국가간의 무역을 통해 상호의존이 증진된다면, 서로 이익을 얻게 되어 협조적인 관계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즉, 국가들 사이에 경제면의 협력이 증진될수록 안보면의 협력도 증진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가들간에 경제협력이 증진되어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면 평화를 해치는 전쟁에의 유혹도 줄어들 것은 자명한 일이다.

오늘날 일상적으로 쓰는 평화는 대체로 두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나는 소극적 측면에서 평화를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와 동일시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적극적 측면에서 평화를 전쟁이 부재한 상태만을 뜻하기 보다는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고, 나아가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면서 모든 갈등과 분쟁을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토론과 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정의로운 인간공동체를 창조하는 과정으로 규정해 보려는 입장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는 소극적 평화가 아니라 적극적 평화이다. 제주의 평화의 섬 구상도 이러한 적극적 의미의 평화질서에 토대를 둔 정의로운 인간공동체를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가들 사이에 있어 평화질서는 한 국가가 자의적으로 폭력적 수단(전쟁 및 테러)을 동원하여 타 국가를 침략할 수 없는 상태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질서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평화질서는 전쟁없는 상태란 소극적 의미와 그것의 제도적 보장이라는 적극적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은 국가간의 법률이나 조약 등의 합의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적극적 의미의 제도화된 평화를 동북아시아에서 어떻게 달성하느냐가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이다.

아시아지역에는 문화와 역사가 다른 다양한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그리고 중국, 북한 및 베트남과 같은 사회주의 성격의 국가들이 있어 안보면에서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와 같은 집단안보체제를 결성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에 있다.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 미국과 소련의 대결구조가 와해되고, 중국도 개방정책으로 서방측과의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그리고 아태지역국가간의 경제협력이 활발해짐에 따라 아시아에서도 안보면의 레짐<sup>1)</sup> 결성이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라는 개념 하에서 서서히 논의되고 있다. 협력안보는 냉전 종식 이후에 전개되고 있는 국가간의 안보면의 협력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대두된 개념이다.

오늘날 핵무기의 확산과 환경문제의 대두 등으로 세계평화와 안보는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공동 노력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절박한 시점에 있다. 협력안보

---

1)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이란 국제관계의 어떤 특정 쟁점영역에 있어 행위자들의 기대가 수렴되는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일련의 원칙, 규범, 규칙, 정책결정절차의 총체라고 정의한다. 즉, 국가간의 상호의존 관계에 영향을 주는 일련의 국가의 행위들을 지배하는 협정이며, 이 지배적인 협정들은 규칙의 네트워크, 규범 및 절차를 가지고 국가의 행동을 규제하고 그 행위의 결과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레짐은 개별 국가 정책의 의도와 투명성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나 의심을 서로 하지 않게 하며, 상호 협력을 촉진해 갈 수 있게 한다.

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국가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해감으로써 공동으로 안보를 달성하자는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협력안보는 예방외교 활동을 증시하며, 쌍무적 관계보다는 다자적 관계를 더욱 선호한다. 그리고 국가간의 대화를 습관화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데 역점을 둔다. 안보체계에서 국가가 주된 행위자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비국가적 행위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자간의 조약 및 협약과 같은 제도적 장치는 물론 국가간의 정기적인 대화체의 결성이나 비정부간의 교류를 정례화 하는 것 등은 이러한 협력안보의 틀 속에서 대화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결국, 이런 과정이 좀 더 구체화되고 제도화된다면, 이는 바로 안보레짐을 구축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지역에는 이러한 안보레짐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는 않으나, 이러한 테두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으로는 '아세안지역포럼'(ARF), '아태안보협력회의'(CSCAP), 동북아다자간안보협의체'가 있다.

1990년 7월에 캐나다의 외무장관 조 클라크(Joe Clark)가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와 유사한 북태평양안보협력대화(NPCSD)가 미국, 캐나다,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북한 등 북태평양지역의 국가들간에도 구성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한 이래, 동북아시아에서의 다자간안보협의체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간헐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1994년 7월 한국의 한승주 외무장관이 아세안지역포럼(ARF)에서 남북한과 주변의 4대강국간의 동북아안보대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민간인과 정부의 관리가 동시에 참석하는 형식으로 샌디에고의 캘리포니아대학 '세계갈등협력연구소'(Institute for Global Conflict and Cooperation)의 주관하에 1993년부터 동북아시아협력대화(Northeast Asian Cooperation Dialogue, NEACD)가 추진되어 오고 있다. 1993년 10월에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한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의 학자와 군장교 그리고 외교관들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참석해서 한반도문제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안보문제에 대해서 신뢰구축조치와 각국의 입장을 논의하였다. 북한은 이 회의의 준비단계에서 가진 모임에서 참여할 것을 약속했었으나 첫 번째 모임부터 참석자를 보내지 않았다. 제2차 회의는 동경에서 개최되었는데, 여기에서 참석자들은 두 개의 연구모임을 발족시키기로 합의하였다. 하나는 포괄적인 협력의 원칙을 만드는 임무를 가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상호신뢰보장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동아시아국가간의 경제협력관계가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안보면의 협력관계도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시아협력대화'의 경우처럼 동북아시아에서도 걸음마 단계이기 하지만 다자간안보대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 점차 공식적인 '동북아다자간안보협의체'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민간 차원의 대화가 점점 확대되어 상호 신뢰가 구축된다면 동북아국가간의 공식적인 대화로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냉전종식이후에 아시아에서의 미국 지도력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고, 동북아시아에서의 핵확산, 영토문제를 둘러싼 분쟁, 한반도의 분쟁 가능성, 그리고 일본과 중국간의 패권경쟁 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협의를 할 '동북아다자간안보협의체'의 구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한 형편이다. 동북아시아는 다자간 대화나 협력의 경험이 비교적 없기 때문에 이것이 구성되어 역내국가간의 대화 관습을 축적하고 협력을 배워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된다면 '협력안보'의 차원에서 동북아시아국가들 사이에도 안보문제의 제도화가 점차 가시화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동북아다자간안보협의체를 어떠한 방법으로 구축해 갈 것인가?

첫째, 현재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신태평양공동체'를 제안할 정도로 다자간안보협의체에 대

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더 구체화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같은 패권의 야망이 없는 국가가 기업가적 또는 지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매우 유용할 것이다. 한국은 다자간안보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역설해야 하며, 협의체의 구성원칙과 규범, 규칙 및 의사결정절차에 대한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적극 제의해야 한다. 특히, 협의체에서 다룰 의제내용에 대해서도 모든 참여국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슈들을 중점적으로 개발하여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난민, 테러방지, 마약, 환경보전, 오염방지, 해상안전감시, 공동해양개발, 그리고 해적퇴치 등과 같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비정치적 이슈들을 먼저 내걸고, 이것을 통해 점차 협력의 관습을 축적한 후에 영유권 중재문제, 군축문제, 핵확산방지과 같은 정치·군사문제들을 제의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동북아시아에서의 다자간안보협의체의 구축은 다자적 대화와 비정치적 부문이 선행하는 '연성 다자주의'(soft multilateralism)의 방식으로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APEC의 결성에 있어 호주가 행한 역할을 참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둘째, 안보면에 있어 정부간의 공식적인 대화나 협력은 상호불신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민간단체나 민간기구를 활용하여 정부간의 안보대화 및 협력을 유도하는 제2트랙(track two)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1993년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는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가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국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의 연구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다자간안보협의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각 국가의 여론이 이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된다면, 정부들도 결국에는 협의체 결성을 서두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냉전기 중에 역외국가들 특히, 강대국들과의 안보협력이나 안보대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ASEAN이 냉전 종식 이후에 ARF와 같은 다자간안보대화체 출범에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를 취했는데, 이러한 ASEAN의 경험과 태도로부터 지역협력에 대한 전략을 배울 필요가 있다. 즉, 동북아시아에서도 ARF와 같은 다자간안보대화 정도라도 우선 시작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ARF처럼 매년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여 공통의 이해와 관심이 있는 정치·안보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와 협의의 습관을 기르고, 동북아시아의 신뢰구축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ARF처럼 회원국을 너무 한정하지 말고 참여를 원하는 국가들은 읍져 버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캐나다와 같은 경우는 동북아다자안보대화를 제안한 적도 있으므로 참여시켜, 지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도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를 외무부 내에 상설하는 것도 매우 유용할 것이다.

넷째, 동북아시아의 다자간안보협의체는 기존의 양자관계를 해치지 않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과 일본이 그 동안 다자간안보협의체 구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구상이 미일안보조약을 대체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다자간안보협의체는 동북아시아에 이미 확립되어 있는 쌍무관계나 앞으로 전개될 양자협상의 중요성을 부정 또는 잠식하지 않도록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동북아시아의 다자간안보협의체가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참여국 정상들간의 정례회합, 안보·외교관계 장관급회의 개최, 외교·안보고위실무자 접촉, 사무국 설치, 분쟁방지센터의 설치 등을 추진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들은 하나의 문서로서, 이를테면 '동북아국가간 기본관계 합의서'의 형태로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역안보 문제를 전담하여 처리할 수 있는

사무국을 설치하고 분쟁방지센터, 분쟁중재재판소, 군축위원회, 검증·사찰팀 등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들 사무국, 분쟁방지센터, 분쟁중재재판소 및 군축위원회 등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경우와 같이 참여국에 분산 배치하여 역내국가간의 안보와 관련된 제반문제에 대한 다자협력을 긴밀히 도모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 동북아시아에서도 다자간안보협의체라는 안보레짐이 구축되게 된다면, 그것은 곧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견고한 토대가 될 것이다. 레짐은 불확실한 행위자들 사이에 투명성을 높여주어 상호신뢰를 구축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한국으로서는 동북아다자간안보협의체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더 나아가 평화통일에도 적극적인 기여를 할 것이므로 이것이 성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4자회담이 성사된다면, 이를 더욱 확대시켜 동북아다자간안보협의체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더욱 발전되어 아시아의 집단안보기구로 성장하는 것이 한국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약소국은 강대국의 행위를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집단안보기구에서 가장 확실한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 때문이다.

### Ⅲ. 제주 '평화의 섬'의 구축 전략

냉전 종식 이후에 동북아시아 국가간의 경제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제간의 교류협력과 경제협력도 한층 더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제주도의 위상과 지리적 이점에 대해서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다. 즉, 새로운 동북아시아의 주체적인 참여자로서 제주도가 동북아의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비전이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비전이 구체화된 것이 바로 제주도의 '평화의 섬' 구상이다. 동북아시아의 경제 및 학술교류와 협력의 장으로서, 분쟁해결센터로서, 그리고 각국 정상들의 회담장소로서 제주도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활발히 전개된다면 '평화의 섬' 구상은 더욱 구체화될 것이다.

#### 1.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의 필요성

제주도가 단순한 관광지로서 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신뢰구축을 위한 평화회담 장소로서,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하여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선포,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공헌하려는 시민수준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평화의 섬'은 결코 '노비자(No Visa)' 등을 통해 외국관광객의 유입을 극대화시키려는 관광진흥수단을 의미하지 않는다. '평화의 섬'의 기본 전제는 제주를 비무장, 비군사지대화시키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지역에 있어서 평화에 관한 국제회의, 연구, 훈련의 중심지로 제주를 부상시키려는 시민수준의 노력을 의미한다. 평화란 비군사화를 넘어서 균형

된 발전을 토대로 하여 이룩되는 것이므로 분배적 정의와 사회복지의 실현을 통해서 계층간 갈등의 소지를 줄여나가는 정의로운 인간공동체의 구현이야말로 '평화의 섬'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어떤 연유에서 제주가 '평화의 섬'이 되어야 하는가? 그 첫째는 지정학적 이유이다. 제주도민이 일심단결하여 '평화의 섬'으로 선포하지 않는다면, 제주도는 동북아 군사대결의 소용돌이 속으로 말려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군축협상의 가속화와 그에 따른 한국의 공세형 무기의 후방배치, 포스트 필리핀 이후의 미 태평양전력의 전진배치 등은 제주도가 군사기지화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바로 이러한 움직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평화의 섬' 선언은 바람직하다. 둘째로 제주도의 문화·역사적 전통과 유산이다. 제주의 '三無精神'은 평화의 가장 원초적 정형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화적 유산을 복원한다는 점에서도 '평화의 섬' 구상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4·3사건'이란 역사의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평화의 섬' 구상은 당위론적인 것이라 하겠다. 셋째로 제주사회의 정의로운 복지공동체를 이룩해 나가기 위해서이다. 제주도의 내생적 개발과 관련, 평화추구적인 제주지역개발의 모형과 전략을 수립·추진해 나가기 위한 전제로서도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 2. 제주 '평화의 섬'의 구축 전략

평화의 섬을 운영할 주체인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들은 평화의 섬 구축에 대한 각기 다른 목적을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중앙정부로서는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여 육성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평화에 대한 다양한 전략과 함께 유연성을 과시할 수 있는 잇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제주도 내 지방자치단체는 제주자연특성인 그린(Green)과 평화라는 상품을 연결한 관광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관광상품의 다양성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출입에 대한 제한 철폐, 기반산업시설의 확충, 평화의 섬에 대한 각종 이벤트와 시설 등을 통하여 국내 관광객은 물론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예상된다.

셋째, 주민의 입장에서는 평화로운 환경조성으로 인하여 불안에서의 해방감이라는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화의 섬과 연계된 지역개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제주의 '평화의 섬' 구축에 대한 전략은 이러한 흐름과 일치하는 선상에서 모색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현실적이면서 실용적인 대안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 등의 역할을 중심으로 전략대안을 제시하여 나갈 것이다.

### 1) 중앙정부의 지원기반 구축과 후원자적 역할

중앙정부는 제주의 평화의 섬 구현을 위해 제주도 내 지방정부 또는 시민단체에 대한 후원자적 노력을 자임하여야 한다. 이러한 후원자적 노력에 대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 (1) 유엔 및 주변국가와의 협력 기반 조성

비군사화 정책인 '평화의 섬' 정책은 동맹국인 미국조차도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볼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제주도의 '평화의 섬' 선포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책일 뿐, 국가방위 또는 안보정책에 대한 기존노선의 변화가 아니라는 점 등을 동맹국과 관련 국가에게 확신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선행된 후에 외교권을 독점하고 있는 중앙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가. 유엔 산하기구 등 국제기구의 제주도 유치 노력

유엔의 창설 목적이 세계평화 정착이므로 이는 제주 평화의 섬의 주창 동기는 일맥상통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유엔에 관련된 산하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남·북한의 대치가 평화와 대치되는 이유도 있겠지만 유엔 가입 시기가 너무 일천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우리나라는 지구상에 가장 큰 군대와 막강한 화력이 대치하고 있는 마지막 분단지역이기 때문에 유엔 산하기구의 유치는 매우 의미가 있으며 상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엔 산하기구의 본부가 아니더라도 동북아 또는 아시아, 태평양 사무소 형태의 분소 설립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러한 기구들이 한국에 유치했을 때,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서울보다는 제주지역을 평화의 섬으로 선포함으로써 유엔의 평화 이미지와 제주도를 일치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제주도에 이 기구를 유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유네스코의 여러 산하기구들을 유치하는 것도 가능성도 높고 바람직하다. 이런 국제기구들이 유치된다면 제주를 세계에 알리기도 쉽고, 관광의 수준도 좀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 나. 동북아와 관련된 기구본부 및 회의 유치 적극 지원

동북아다자간안보협의체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사무국, 분쟁방지센터, 사무국 등이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경우와 같이 참여국에 분산 배치될 것이므로 이를 제주도가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더욱이 제주도를 동아시아의 평화를 모색하는 모든 종류의 국제회의나 회담의 장소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제주를 삼무의 사회로 재건하는 것이 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하는 '평화의 섬'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제주도에 동아시아지역의 안보문제를 조정하는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제주도는 아시아·태평양의 제네바나 비엔나가 될 수 있도록 세계적인 평화센터로서 중심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가) 아시아·태평양지역 군축회의 사무국의 유치

유럽의 긴장완화를 가져오기 위한 유럽안보협력회의를 구성하려 할 때 유럽의 여러 도시가 그 유치를 경합을 벌였으나 비엔나에 설치되었다. 이제 아태지역 국가간의 군비축소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제주도에 동북아 군축회의 사무국이 설립돼야 한다.

#### 나) 지역분쟁해결센터의 설립

이 지역 분쟁해결센터는 남·북한 문제를 포함한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국가간의 어업 및 자원분쟁 등을 다루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분쟁해결센터는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 즉, 이 센터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 전에 분쟁을 중재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

치적인 보완조직을 의미한다.

#### 다)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의 평화를 위한 연수원과 연구소의 설립

이 평화연수원과 평화연구소는 이 지역의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문제인 신뢰구축을 위한 평화회담, 군비통제, 군비축소 등과 같은 문제를 연구하고 연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 연수원과 연구소는 이러한 복잡하고 전문적인 문제에 실질적으로 종사하고 회담에 참여하는 관계인사를 연수시킴으로써 신뢰와 평화구축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 다. 평화의 섬 특례법의 제정과 이에 따른 기반시설의 지원

정부는 국제회의의 부가가치성을 인식하여 국회에서 '국제회의육성산업에 관한 법률'을 1996년 말에야 겨우 통과시켰다. 이 법에 의하여 정부는 일정한 도시를 선정, 국제회의 도시로 지정하여 지원을 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여타의 지역과는 격이 다르다. 그 간의 경험과 기존의 시설, 그리고 뛰어난 풍광을 고려하면 제주도를 여타의 지역과 같은 성격으로 지원을 하여서는 비교우위를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가칭) '평화의 섬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국제회의 산업에 필요한 최고의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공항과 항만, 그리고 도로 등의 기반시설과 첨단 정보통신시설을 갖추어 세계적인 어떤 회의도 개최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제주도를 남·북한 회담을 비롯한 동북아 국제회의 장소로 활용함으로써 남·북한과 동북아의 긴장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을 제주의 평화의 섬이라는 프로젝트에 의해서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평화의 섬에 대한 특례법'은 제주도가 추진중인 시범자치에 관한 법 또는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추진하여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 법에 '노비자'를 비롯한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일부 치안도 자치단체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 2)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전략

제주도에 '평화의 섬'을 정착시키는 일은 우선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일 수 밖에 없다. 제주도 산업구조상 제조업이 5%이하이며, 제3차산업의 중심산업인 관광산업도 영세한 규모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민간부문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주도의 사정이다. 그래서 민간부문이 성숙되어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집행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평화의 섬' 정착을 위하여 추진할 전략은 다음과 같다.

### (1) 평화의 섬에 대한 이미지 구축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 되기 위해서는 이미지 개선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주도민은 물론 전국민의 관심과 지원이, 더 나아가 전세계인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제주가 평화의 섬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하게 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 가. 국민들의 정상회담장소라는 이미지 부각

환경문제만 나오면 '리우선언'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4자회담이 논의될 때마다 김영삼 대통

령과 클린턴 대통령의 '제주선언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서 회자될 것이다. 이는 제주의 이미지를 심는 데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앞으로 제주도는 항상 정상회담을 할 준비가 갖추어진 지역으로 이미지 구축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는 자연스럽게 곧 제주관광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오는 날은 그 주간을 그 나라 또는 정상 의 이름을 따서 명명을 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예를 들면 '미국의 날 또는 클린턴 주간' 등으로 명명하여 그 나라 또는 국민에 대한 최대한의 관심과 예의를 보여 주는 것이 그 나라와 그 정상에게 제주도의 이미지를 심는 데 더할 나위 없이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더욱이, 제주는 남북한의 정상회담 장소로서도 활용되어야 한다. 그동안 남북회담 장소로서의 판문점과 서울 그리고 평양은 장소 자체가 회담대표들로 하여금 화해 노력보다는 '제로섬 게임'에 임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평화의 섬'인 제주는 남북한 모두에게 부담없는 대화의 장소를 마련해 줄 것이므로, 멀지 않은 장래에 남북한 정상이 만나 민족의 장래를 논의하는 곳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

#### 나. 평화의 섬에 대한 각종 로고의 제작 보급

로고는 그 지역 또는 해당 행사의 상징이다. 따라서 로고도 이미지 정착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평화의 섬에 대한 로고는 매우 다양하게 사용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문서 또는 관공서 건물의 문양으로, 행사 때마다 사용되는 깃발 등으로 용도가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로고는 곧 제주도를 상징할 것이며, 이 상징은 바로 평화의 섬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도록 로고의 생활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는 '평화의 섬'(Island of Peace 또는 Peaceful Island)이라는 문자와 이에 걸맞는 로고를 시급하게 제작하여 생활화하여야 하겠다. 이 로고와 함께 평화의 섬에 대한 노래도 같이 만들어 보급을 한다면 이에 대한 효과는 증폭될 것이다. 특히, 로고와 노래는 일단 전국을 대상으로, 나이에 관계없이 옹모토록 함으로써 평화의 섬에 대한 홍보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평화의 달, 평화주간, 평화의 날의 선포

평화의 달은 4월이나 5월달 중 한달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4월은 우리 지역의 최대 비극인 4·3사건이 발발한 달이다. 평화를 파괴한 달인 4월을 역설적으로 평화의 달로 선정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현실감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4월을 채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4월이 평화의 달로 선택되면, 4월 3일은 평화의 날로, 4월 3일이 속한 주간은 평화의 주간으로 선정하면 된다. 4월이 평화의 달로 선정된다면 우선 종교단체가 연합이 되어 4·3사건으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종교적 행사를 통하여 영혼을 위로하고, 이를 평화로 승화시키는 행사를 주도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리고 4월에 열리는 도내 각종 행사도 평화의 섬과 연계하여 치루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5월을 추천하는 이유는 어린이의 달이라는 것 때문이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어린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평화의 상징인 것이다. 미래의 세대에 대한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5월을 평화의 달로 선택하는 것을 추천해 보고자 한다. 5월이 평화의 달로 선택되면 5월 5일은 평화의 날로, 5월5일이 속한 주간은 평화의 주간으로 선정하면 된다.

## (2) 평화에 대한 시설의 건립과 운영

평화의 섬에 대한 이미지는 무형적인 것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평화에 대한 이미지는 이에 따른 시설이 건립되고 운영될 때 항구적으로 구축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몇 가지 시설을 제안하고자 한다.

### 가. 평화공원의 건립

일본의 오키나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있는 '평화공원'들이 평화의 산 교육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제주도도 '평화공원'의 설립을 사업 제1순위로 선정하여 건립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공원에는 4·3사건에 희생된 사람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위령탑과 함께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을 묘비에 새겨 후손에게 산 교육장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외에 태평양전쟁에서 강제 징용되어 희생이 되었던 제주도민, 한국전쟁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위령탑도 세워서 그들의 영혼도 달래면 더욱 좋을 것이다. 또한 이 공원에 '평화의 종'을 설치하여 새해의 시작을 알리거나 4·3사건 행사 등 제주도와 관련이 깊은 행사 때마다 타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 나. 평화박물관·평화민속촌의 건립과 운영

평화박물관에는 지금까지 도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와 국외까지 전쟁에 관련된 자료와 유물을 중심으로 보관, 전시하는 곳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평화의 섬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지역과 관련된 자료와 유물을 중심으로 보관되고 전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다면 제주지역의 평화박물관은 4·3과 관련이 있는 유물이 중심이 될 것이며, 나머지는 한국전쟁과 태평양 전쟁의 유물이 될 것이다.

평화민속촌은 제주도의 전통과 문화가 평화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 주기 위하여 평화를 주제로 한 옛 마을의 복원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겠다. 평화라는 주제를 고유문화와 연계를 하면 다양성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화를 사랑했던 옛 선조들을 후손들이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곧 평화의 섬의 토대가 될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 다. 평화의 섬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

평화의 섬에 대한 이론적 뒷바침과 함께 이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전문적으로 기획하기 위하여 연구소가 필요함은 당연하다. 평화연구소도 비교우위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화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특화된 연구소가 되기 위해서는 4·3사건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제주도의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조사한 제주도 4·3사건피해조사보고서를 년 픽션(non-fiction)화 하여 영상화하고, 기타 이에 관련된 자료를 DB화 하여 자료의 효용도를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소는 여러나라의 세계평화지대와 연계하여 평화지대네트화(ZOPNET)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정보의 공유와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채널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 연구소는 거대한 좋은 건물과 많은 연구직원을 두는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기존의 연구소와는 달리 발달된 정보통신을 이용한 가상연구소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라. 평화의 섬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

이와 같은 평화의 섬의 구축을 위한 재원은 평화의 섬 정책이 기업에게 이익이 돌아갈 경우에

한해서 기부금을 내게 하거나, 개인들에게 평화의 섬 통장 갖기운동을 벌인다든지, 신용카드회사와 연계하여 일정액의 비율로 평화의 기금을 적립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종교단체 등을 통한 기금모금 방식과 '불용액'을 활용한 공공예산에서 조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산의 불용액은 지출을 잘못 예상하여 과다하게 책정하였거나 계획의 변경과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의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과 예비비 등으로 이루어 진다. 불용액은 일반 회계처럼 짜임새 있게 활용되지 못하고 나누어 먹기식이거나 뺄셈식 집행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불발단성 예산이야말로 지역의 평화정착을 위해서 활용이 된다면 가장 의미있는 예산이 될 것이다. 제주도내 자치단체의 불용액은 민선자치단체에 와서는 많이 줄어 들었지만 아직도 일반회계의 약 5% 내외에 머물고 있을 정도로 액수가 많은 편이다.

이외에도 평화의 섬 추진 조직에 의한 사업을 통한 조달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마. 평화의 섬 추진을 위한 조직의 결성

평화의 섬 자체가 주민들의 생활화와 의식화가 되지 않는 한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의회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의회에서 '평화의 섬 추진 특별위원회'와 이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 방향을 정한 후에 집행기관의 대표, 민간인 대표와 군기관 등 기타 유관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된 (가칭) '제주 평화의 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에 위원장은 도의장 또는 '평화의 섬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맡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는 도의원이 집행기관과 주민간에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금 성격인 평화의 기금을 관리하는 명분을 축적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조직이 어느 정도 정상으로 운영이 되면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등록하여 도의회 산하기관으로 운영하다가 완전히 정상으로 운영이 된다면 민간인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다.

#### (3) 제주후원회(the Friends of Cheju)의 결성 필요

평화의 섬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만으로는 어렵다. 특히, 제주도와 같이 인구가 적고 중앙정부의 중요 부서에 제주 출신 고위인사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주후원회'를 시급히 결성할 필요가 있다. 제주가 고향이 아니더라도 제주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여론선도층'을 선별하여 '제주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를 좋아하는 학자, 문인, 기업인, 언론인, 그리고 제주에 근무했던 전현직 고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여 제주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게 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것이다. '제주후원회'가 결성된다면 중앙정부의 지원, 평화의 섬에 대한 여론 조성, 중앙기업인들의 투자 유치 등을 추진하는 데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제주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자문기구로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4) 평화교육의 필요

제주의 평화의 섬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국제이해교육을 중심으로 한 '평화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무리 주장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평화교육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첫째, 정당, 교회, 시민단체 등 정치, 사회단체의 협조를 얻어 그들 기관을 통해 평화교육을 실천하는 것이다. 특히, 종교단체가 평화교육의 프로그램을 각자 개발하여 시행한다면 제주의 평화의 섬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둘째,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각각에 알맞는 교과과목을 개발하여 의무적으로 수강케 하고 연수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 때부터 평화에 대한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할 것이다. 대학에서도 교양필수과목으로 설강을 하여 대학생 전원이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이해와 함께 평화의 섬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반드시 평화의 섬에 대한 과목 일정량을 설강하여 수강토록 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여론을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한 바의 독일과 프랑스의 경험을 본받아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일본 청소년과의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묵은 한일감정을 청산하고 새로운 동북아시아에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린시절부터 서로를 알고 이해하는 경험이 매우 필요하다. 이런 노력이 곧 평화교육의 일환이 될 수 있다. 제주도과 제주도 교육청은 이 사업에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부모를 위한 평화교육이 필요하듯이 이들 단체들의 실무자들과 교사들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은 어릴수록 선생님을 더욱 모방하기 때문에 교사들에 대한 연수가 절대 필요하다.

넷째, 지방정부나 사회단체들은 평화운동의 확산을 통하여 평화교육을 시켜나가야 한다. 각종 걷기대회, 단축마라톤대회, 자전거 대회를 평화교육과 연계하여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하겠다.

### 3). 민간단체의 역할

제주 평화의 섬의 구축은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된 후에는 시민단체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주민조직 자체가 시민단체에 의해서 움직임은 물론 이거니와 소요되는 예산, 인력도 시민단체에 의해서 충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도내 시민단체들이 제주도내(가칭)민간단체 총연합회를 구성하여 '시민단체네트'를 만들고 이에 대한 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 IV. 결 론

제주의 평화의 섬 구상은 21세기로 바뀌는 세기적 전환기에 있어 제주도가 문명 전환의 큰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기여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는 운동이다. 국제정치학자들은 문명권의 중심이 西進하고 있다는 주장을 한다. 즉, 고대의 그리스와 로마의 지중해 중심권으로부터 중세와 근대에는 유럽의 대서양 중심권으로 바뀌었으며, 20세기의 현대에는 대서양을 넘어 미국 중심권으로 변화했고, 21세기에는 서진하여 아시아 태평양권이 문명의 중심권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론이 없는 것은 아니나, 앞으로의 시대에는 근대이후 소외되고 국제사회의 객체의 위치에만 머물러 있어야 했던 아시아 태평양지역이 세계의 주체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동북아시아는 세계 문명과 교역의 중심지로서 부상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또한 세계 문명의 중심지가 모두 강이나 바다에 접해 있었다는 점, 16세기 자본주의세계체제가 성립한 이후 세계의 강대국들은 모두 해군력을 장악한 국가들이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는 해양중심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매우 중요하며,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무거운 사명감을 안겨준다.

바로 이처럼 제주도가 해양시대에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중심 축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노력 여하에 따라서 대단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주고 있다. 변방이었던 제주도가 이제는 세계 문명의 주역으로서 당당하게 飛上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미리 알고, 이것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우리 미래의 明暗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냉전이후시대는 우리들에게 평화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 그러나 평화는 가만히 앉아 있는 자에게 저절로 굴러 오는 것은 아니다. 평화 질서를 구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주변 상황은 냉전 종식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것처럼 평화 질서가 구축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의 평화의 섬 구상은 동북아시아의 평화 구축에 단초를 제공하려는 운동이다. 제주가 평화의 메카가 된다면 여기에서 출발하여 동북아의 여러 도시로 확산하고, 점차 세계로 확대하려는 큰 뜻을 가진 운동이다. 특히, 세계화와 지방화의 시대는 역사의 흐름을 국가보다 시민사회가 주도하게 만들고 있다. 즉, 시민이 주도하여 평화질서를 모색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런 시민주도의 평화 운동이 국가이익 중심의 이기주의를 압도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신명나게 살 수 있는 진정으로 제도화된 '적극적 평화'는 이룩될 수 있다. 이러한 적극적 평화를 이룩하는 단초를 제주의 평화의 섬 구상은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적극적 평화를 이룩해 가는 과정에 제주도는 '평화의 섬'을 구축함으로써 크게 기여할 수가 있다. 제주도의 개발과 관련하여 이러한 평화추구적인 개발 전략은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더 나아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그리고 세계평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를 앞당기기 위해 제주도민이 '평화현장'이나 '평화의 섬 현장'을 먼저 선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